

## “강원상품권 임금으로 사용 못해”

道, 문제 없도록 시스템 마련

속보-강원상품권 유통 과정에서 시민경제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18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도가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강원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매년 3조~4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도내 발주공사를 수주하는 외지건설사에게 2014년 기준 1조4,100억원이 지급됐지만 대부분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공사 장비는 물론 자재와 인력까지 대부분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강원상품권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해 지역 내에서 자금이 선순환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강원상품권을 외지 건설사의 대금으로 지급하면 하청업체를 거쳐 결국 힘 없는 근로자의 임금 대응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식자재비, 임차료, 운반비, 차량비 등 일반관리비와 제반경비 위주로 유통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원중 도 경제진흥국장은 “강원상품권은 도의 주력산업인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과 쇼핑 등에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외지건설업자에게는 사용처를 제한하는 한편 임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 원주~강릉 복선전철 6개 역사 내달까지 착공

지역특성 살린 설계 디자인 기대

원주~강릉 복선전철에 들어설 6개 역사(驛舍) 공사가 다음 달까지 모두 착공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강영일)은 중앙선 철도에서 분기되는 원주~강릉 철도 구간에 1,300억원을 들여 역사를 건설한다. 지역별로는 원주시에 만

종역, 횡성군에 횡성역과 둔내역, 평창군에 평창역과 진부역, 강릉시에 강릉역이 각각 들어선다.

공단은 만종역과 강릉역 신설 공사를 지난달 발주해 이달 중 착공하고 횡성역, 둔내역, 평창역, 진부역 공사는 지난 10일 발주해 다음 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 공단은 이들 역사 설계 때부터 지역적 특성을 형상화한 개성과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했다.

만종역은 ‘망종(望宗)’이라는 옛 지명에 착안해 망원경 형상을 만들었고 횡성역은 한우로 유명한 횡성의 특징을 살린 소뿔 형태, 둔내역은 둔내자연휴양림을 나타내는 나뭇잎, 평창역은 노성산성, 진부역은 스키·전나무, 강릉역은 해(해돋이)를 테마로 설계했다.

평창역과 진부역은 막바지 디자인 수정중이다. 정익기·유학렬

## 올림픽경기장 진입 마지막 노선 착공

【평창】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 진입도로 5개 노선 중 마지막 노선인 군도 14호선 진부IC-호명교 간 확·포장공사가 다음 주 중 착공된다.

원주-강릉간 고속철도의 영동고속도로 진부IC에서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연결하는 군도 14호선 진부IC-호명교 간 확포장공사는 모두 30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2km 구간을 걸쳐 4차로로 확·포장 될 예정이다.

평창군 군도 14호선 306억원 투입 다음주 확·포장 공사

기존 군도 14호선은 선형의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협소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만큼 기존 구간에 대한 평면 및 종단의 선형을 대폭 개량해 설계됐다.

또 기존에 차량과 보도가 함께 있던 오대교는 차량 소통용으로만 사용하고 오대교 옆에 보도교 2개를 신규로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군도 14호선 확·포장 공사를 2017년 말까지 준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알펜시아리조트와 용평리조트 등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원주~강릉 고속철도,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해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

는 선수와 임원, 관객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경기장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근용 군 안전건설과장은 “조기에 실질적 착공이 이뤄지도록 주민 요구사항 중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반영해 보상에 나설 여정”이라며 “기간 내 공사를 마쳐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25@kwnews.co.kr

## “임금채불 근절 효과” vs “공사대금 묶여 위축”

건설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에 반대하고 나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발주공사에서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적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은 발주기관, 원도급자, 하도급자, 2차협력자 등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전과정의 대금관리를 전자화하는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지자체 등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6조원 규모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불

정부 ‘인출제한 제도’ 포함 공사대금지급 시스템 확대 건설업계 반발  
업계 측 “불필요한 이중 규제-경기 활성화 위해 차등 적용” 주장

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 중 14조원 규모의 공사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에 인출제한 제도가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인출제한 제도를 이용할 경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본인 자금 이외의 공사대금을 활용할 수 없어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대금채불 근절을 위해 인출제한 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인출제한이 기업의 자금운용을 떨어뜨려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기업활동력도 제약 받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등 채불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채불한 적이 없는 건설사들이 채불 문제를 일으킨 일부 건설사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윤기자 law4530@

## 원주~강릉철 역사

### 내달부터 착공

원주~강릉 철도 역사 건설 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 노병국)는 원주~강릉 철도 구간에 총 6개의 역사를 건설키로 하고 내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중 완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신설되는 역사는 만종역(원주), 횡성역(횡성), 둔내역( # ), 평창역(평창), 진부역( # ), 강릉역(강릉) 등으로 총 1300억여원이 투입된다.

철도공단은 만종역과 강릉역 건설 공사에 대해 지난 4월 발주에 나서 가장 빨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4개 역사는 지난 10일 발주함에 따라 늦어도 내달 중 착공한다.

특히 이들 역사는 지자체 의견과 외부 전문가 자문 심의 등을 반영, 지역 특성을 형상화해 디자인된다. 만종역은 '망종(望宗)'이라는 옛 지명에 착안한 '망원경', 횡성역은 횡성의 특징을 살린 '소뿔', 둔내역은 둔내자연휴양림을 나타내는 '나뭇잎', 평창역은 '노성산성', 진부역은 '스키와 전나무', 강릉역은 '해돋이' 등으로 건설된다. 원주/정태욱

## 건설 안전사고 발생 때 시공·감리자 발주처·인허가 기관에 신고 의무화

과태료 최대 300만원... 실시단계 단계부터 안전성 검토해야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건설사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 관리체계가 사후 대응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와 인·허가 기관에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건설안전정보 시스템에 건설사고 신고 시스템을 설치해 건설공사 담당자가 쉽게 사고를 보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건설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발주처나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설사고는 공사 도중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1000만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은 또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발주처가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실시단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공사와 구조검토 의

무화 대상 가설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는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 흠막이 지보공 등이다.

높이가 10m 이상 인 천공기·타워크레인 을 사용하는 공사와 인허가 기관장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했다.

또 안전관리계획에 계측장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고 설치·운영비를 발주처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이 밖에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처를 추가해 발주처의 안전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철강구조물 공장의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발주처 또는 인·허가 기관에 대해 안전한 공사 여건 확보와 지원, 건설사고 발생 현황 등으로 안전 역량을 평가하고, 건설기술 용역업자와 시공자는 안전경영 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등으로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 “장·차관급 이란 수주지원단 하반기 파견”

사절단 방문 후속조치 논의  
유료결제 시스템 시간 필요  
250억달러 금융 적기 투입

민관협업체 가동, 애로 해소  
현지 민간투자제도 수립 지원

정부가 이르면 하반기 중 이란에 장·차관급 수주 지원단 파견을 추진한다. 또 이란 수주 지원을 위해 고위급 수주 지원단을 수시로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국토부장관-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경제사절단 방문 이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란 방문 후속조치에 대해 4가지 계획을 밝혔다.

강 장관은 “기업들이 희망하고 있는 결제시스템 구축은 아직 유럽 은행이 이란과의 거래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재부 등 금융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50억달러의 금융 패키지 적기 지원 등 금융 지원과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공공부문에서 체결한 인프라 MOU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이란진출 민관 협업체’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 기업의 공동 진출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별 애로사항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로도시개발부와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은 6개월마다 만나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란 측에서 관심을 보이는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와 통근시스템 개선, 공항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술이 수출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셋째,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개발사업의 선제적 진출을 위해서 이란 측에 민간투자 관련 법·제도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도로 시장에 대한 조사와 이란 투자유치정책에 대한 연구가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열린 ‘이란 진출 건설·유관업계 간담회’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유관업계 대표들이 이란 수주 후속조치 진행사항 점검 및 사업 구체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으로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 장관은 “필요하다면 고위급 수주지원단도 수시로 파견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본계약에 이르기까지 금융 조달부터 결제시스템, 중국·유럽 기업과의 경쟁 등 직면한 어려움이 여전히 많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종 계약 때까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사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란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이란 방문 성과가 최종 계약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소통을 강화하고 밀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업계 건의사항에 귀 기울여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설단체에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내삼 부회장, 백영선 해외건설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건설사에서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 허선행 GS건설 부사장, 김한기 대림산업 사장, 김원탁 두산중공업 사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 중대형 건설사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건설금융기관에서는 박승준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연구기관에서는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상준기자 newspia@

## 이란 수주 후속조치 세부내용은?

### 공기업 ‘예타’ 기간 단축... 민관합동 진출 활성화

**공기업-민간건설사 공동진출** = 공기업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기업 해외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해서는 현행 7~8개월 걸리는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게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수주에 공기업의 운영관리 능력과 민간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결합해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요건 완화를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 공기업 정상화 문제도 걸려 있지만 해외진출 필요성은 기재부도 공감하는 만큼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인프라 분야별 이란 진출 협업체를 운영해 공공-민간 기업이 공동 진출토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 금융을 통합 추진하는 상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금융지원 협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유료화 결제 시스템 조기 구축에 대해서 기재부 등 관계 당국을 대상으로 협의를 지속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료화 결제 시스템 구축에는 미국 정부의 양해를 얻고 유럽계 은행이 취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미국 측에 공식 질의했으나 아직 화신이 없다. 기재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딩 갭 해소** = 건설업계에서는 이란 등 발주처가 총사업비에서 15%만 총당하고 나머지 85%는 금융우선을 요구하고 있어 애로가 많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출입은행 등서 55%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나머지 30% 정도가 부족한 ‘펀딩 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산업은행·기업은행·시중은행·연기금·외국계 은행 등을 통해서 메우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양질의 투자 사업에는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코리아 해외인프라펀드(KOIF) 등을 통한 금융 투자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이란 민간투자법 등 법·제도 수립 지원** = 현재 이란은 다수 민간 투자개발 사업이 발주 예정이다. 하지만 현지 법규가 국제기준에 미흡한 것이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란 투자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투자환경 분석, 우선순위 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상준기자